



농림부

‘가축 및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부는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를 통해 조사한 ‘가축 및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8월 7일 발표했다.

양축농가의 생축 출하처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육가공업체의 규모와 시설이 미흡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율이 많았으나, 최근 계열화, 도축장시설 현대화 등의 영향을 받아 ‘육가공업체’나 ‘계열업체’를 통해 출하하는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축의 유통경로를 보면 닭의 경우 계열업체와 위탁계약사육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열업체를 통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축산물이 도축·가공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을 보면 전체 대비 한육우 26%, 돼지 21.5%, 육계 47.5%가 ‘중간유통업체’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육가공업체와 소매단계간 직거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 소비자들의 구입 경로를 보면 닭고기의 경우 ‘요식업체와 대량급식처’를 이용하고 있는 비중이 67.5%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편인데 거래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조건의 확보, 유통비용 축소 등을 위해서는 대

량급식처, 직매장 등을 이용한 소비자 구매비율을 늘려 거래단계를 가급적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부는 소비자들의 육류에 대한 구매 패턴이 고급화, 편의성, 위생 안전성 선호 등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판매방법도 대형 유통업체, 외식, 통신판매 증대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앞으로 ‘축산물 유통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축산물 유통구조가 유통비용의 축소, 중간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투명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가격인하 효과가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에게는 수취가격이 제고될 수 있도록 브랜드 축산물 위주의 계열화 또는 직거래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농림부는 프랑스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중 국제기준과 상이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프랑스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농림부 고시 제2000-36호)’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하며, 또 프랑스를 가금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 식용란 및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6일까지 농림부 가축방역과로 의견서

를 제출하면 된다.

- 전화 : (02)500-1941
- 팩스 : (02)504-0908
- E-mail : hongko@maf.go.kr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마련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이어 최근 들어 소 브루셀라병, 돼지만성소모성질병 등 국내 상재질병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 같은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마련, 앞으로는 농가 등에서 방역규정을 위반 또는 회피로 제1종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제3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도 제1종전염병과 같이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판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해 교통차단,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조치를 강화했다.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하는데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동안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수의사가 하도록 한 것을 농장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장주도 신고의무를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현재는 반송, 소각 또는 매몰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랜더링도 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처리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의 강제 폐기(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만 지급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토록 하여 보상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토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객이 지정검역물을 단순 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했다(자세한 내용은 ‘정책’ P 참조).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

농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4호, 2006.3.24 공포, 2006.9.25 시행)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봉급지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월 29일자로 제정·공포했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공익수의사의 배치는 시·군·구, 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순으로 하되, 기관별 배치 인원은 가축 사육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공익수의사의 급여는 공중보건과의사와 같이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 내지 3호봉으로 책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과 가축방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은 농림부장관이 검역원에서 근무하는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간 변경 및 파견근무 명령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방역 필요시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무지역의 범위를 근무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가축방역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연간 150명(3년간 450명) 수준의 전문 인력을 일

선 방역 현장에 배치하여 인력부족 현상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 항생제 사용절감 추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우리나라 축산물 잔류 위반율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낮은 편임에도 소비자는 축산물에 많은 항생제가 잔류되어 있는 것 같이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물질의 단계적 축소 등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추진대책이 마련된다.

농림부는 지난 8월 14일 축산물 항생제 사용절감 추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배합사료내 첨가 항생제 중 미국, 일본, EU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배합사료 첨가 항생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우선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축사육 농장에서의 항생제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축농장에서 도축장에 가축 출하 시 농장주가 후기사료 급이 증명서 발급을 제도화하는 등 출하용 후기사료 급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가축사육 농장에서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는 원인은 열악한 사육환경과 고밀도 사육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축종별로 친환경축산 및 사육단계 HACCP와 사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사육환경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항생제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농가의 비용부담 및 검진·처방 문제가 발생하고 동물병원 개설 근무 수의사 부족으로 적기 치료가 곤란하다고 보고 농림제도개선 중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배합사료내 첨가 항생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지정, 일정기간 첨가를 금지

토록 하는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물질에 대한 휴약기간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가와 항생제 사용농가에 대해 차등해서 건강증진물질(유기산 및 생균제, 비특이면역증강제, 물리적 자극제 등)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농촌 투융자 평가협의회 3차 회의 개최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 계획의 지난 3년간의 집행실적을 평가하고 조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농업·농촌 투융자 평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 평가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이후 연구 추진한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협의회 위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분야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분야별 농업·농촌정책의 그동안 추진 실적과 평가, 향후 농업·농촌정책 발전방향(투융자 방향 포함)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되는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수립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조정방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함께 가는 희망한국 - VISION 2030’ 발표

농림분야,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는 8월 30일 ‘함께 가는 희망한국 - VISION

2030'을 발표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 VISION 2030’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략적 사고를 토대로 내놓은 국가 미래전략으로서 50대 핵심과제로 정리되었다.

‘Vision 2030’ 50대 핵심과제 중 농림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투자확대’ 일환으로 농생명산업 육성과 ‘농어촌활력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산업기술개발중자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농정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유형별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달리하는 맞춤형 농정체계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보완·발전 시켜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Vision 2030’을 계기로 농어업인이 활력이 넘치고 살기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맞춤형 농정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전제시와 함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재정전략은 금년말까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점검, 보완하는 과정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새로 구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내의 소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한광원의원이 위원장이며, 위원에는 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제주시 북제주 을)·이영호의원(전남 강진·완도), 한나라당 김광원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김명주의원(경남 통영·고성)·김재원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비례대표)이다.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김영덕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우윤근의원(전남 광양·구례)·조경태의원(부산 사하을)·최규성의원(전북 김제·완주), 한나라당 이방호의원(경남 사천)·홍문표의원(충남 홍성·예산), 국민중심당 김낙성의원(충남 당진)이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김재원의원이 위원장으로, 열린우리당 정세균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조일현의원(강원 홍천·횡성), 한나라당 김형오의원(부산 영도)·이방호의원(경남 사천), 민주당 신중식의원(전남 고흥·보성)으로 짜여졌다.

현안관련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조일현의원이 위원장이며, 위원에는 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정세균의원, 김광원의원·이강두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 민주당 신중식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하반기 혁신활동 본격 추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직원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 분위기 고양을 위한 ‘베스트 지식인 선발대회’ 및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와 간부급의 가나안 농군학교 입소 등을 통해 금년도 혁신활동을 중간점검하고 하반기 혁신활동에 가속도를 붙여나갈

예정이다.

지난 8월 24일 개최한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는 현장에 묻혀있는 우수한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애완동물 데리고 여행할 때, 검역예약제로 편하게 출국하세요' '돼지콜레라 진단용 유전자칩 개발' '어디서나 신고 필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 13개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아울러 검역원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베스트 지식인 선발대회'는 농정상식 및 검역원 주요 업무에 대한 직원간 상호이해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 검역원 본 지원에서 70여명이 선발되어 부서의 명예를 걸고 베스트 지식인을 향한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검역원은 '베스트 지식인'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13개 혁신우수사례 중 평가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작과 우수작(3건)에 대해 상금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간부급들이 혁신활동에 앞장서기 위하여 8월 28일부터 4차에 걸쳐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하여 원장을 비롯한 검역원 전 간부가 혁신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하반기 혁신활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검역검사시스템 업그레이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편리한 검역검사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인터넷 검역검사시스템을 8월 30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터넷 검역검사시스템은 검역검사 제반 서비스 부족 및 디자인의 식상함 등 노후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한 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된 인터넷 검역검사시스템은 검역검사관련 제반서비스(육류검사성적서 제출현황, 해외작업장 승인현황 조회 등)를 포털로 구성한 검역검사민원지원서비스, 민원처리진행정보의 SMS 및 이메일 서비스 및 신고필증(검역증) 출력기능, 운송신청서 출력기능 등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을 개선했으며 전체적인 화면 구성도 편안함과 세련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검역원은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 개선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식품연구원

강원대와의 연구협력 협약(MOU) 체결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강수기)은 지난 8월 11일 강원대학교 교무회의실에서 강원지역 거점국립대학인 강원대와 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강수기 원장을 비롯 강원대 최현섭 총장 등 관계인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우수 인력 양성 개발과 공동연구를 통한 학연협력 활성화로 상호 공동발전 및 우수 호 증진과 아울러 이를 통한 식품기술 네트워크 구축으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식·정보·시설·기술·인력 교류 및 지원'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지식·정보·시설·기술·인력 교류 및 지원' '학·연 연구협력을 위한 인재 양성(석박사 학위과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기술 개발 및 공동연구(식품 BT기술 및 기능성식품개발, 임상실험 등)' '실습 및 현장학습 협력' 등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2차 축산관련단체 방역책임자 간담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8월 29일 제2차 축산관련단체 방역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축방역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축산단체별로 적극적인 홍보와 농가 계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한양돈협회 정선현 전무, 대한양계협회 이종길 전무, 한국계육협회 김정훈 전무, 한국오리협회 김용진 전무,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부장, 한국양록협회 이선우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양계협회, 계육협회는 닭뉴캐슬병의 근절을 위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료채취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농가계도에 앞장서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한우협회에서는 실제 거래우에 대한 소부루세라병 검사 신청 및 방역사와 농가의 체혈시간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키로 했으며, 양돈협회와는 돼지오제스키 근절을 위해 경남 김해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및 시료채취가 적극 협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이날 각 축산단체 방역책임자들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 및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농가를 계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방역본부는 축산관련단체들과 가축방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보다 효율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농장예찰과 시료채취,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건의

김춘진 의원 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사진)은 축사와 창고 등 농림수산업 시설물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춘진 의원은 "현재 정부는 연면적이 60.5평 이상 되는 각종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축사나 창고 등 농림수산업 시설물은 교통유발이나 인구집중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을 요하지 않는 만큼 이들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초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축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송석우 대표이사)은 최근 FTA 등 개방화 시대에 국내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축종별 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 실익증진을 위한 축산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축산부문의 현안사항인 한·미 FTA 추진동향과 국내 축산업 및 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축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핵심방안에 대해 핵심 축산농가 육성,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 위생 및 안전성 강화, 친환경 축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축산물 수입관세의 목적세화를 통해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분야의 피해보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뒷받침 해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농협은 동 대책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정부나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축산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자세한 내용은 ‘기획’P 참조).

‘가공식품 전용 급식물류센터’ 개장

농협중앙회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 가공식품을 단체급식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가공식품 전용 급식물류센터’를 지난 8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농·축산 가공식품 시식 행사와 시설 견학 등이 함께 진행됐다.

이 물류센터는 냉장, 냉동, 상온제품을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가공식품 전용 급식 물류센터로 수도권 북부



지역 일대의 학교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공급하게 된다.

물류센터는 면적 300평 규모로 축산 냉동식품 및 가공품 뿐 아니라 각종 장류 및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3천여종의 품목을 취급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축산물판매분사는 이와 같은 가공식품 전용물류센터를 수도권 주요 거점에 모두 5개소를 9월 중에 개장 운영할 계획이다.

송석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단체급식 사업 진출을 계기로 안전한 우리 농축산 가공식품 공급을 농협이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협은 최근 학교 급식의 위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단체급식 사업에 대한 학교당국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향후 단체급식사업에 농협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육계농가협의회

농가 성명서 발표

전국육계농가협의회(회장 심순택)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닭고기 생산업체(4개사)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비난하며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육계농가협의회는 지난 8월 1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국농업경영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는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모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003년 당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육계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져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닭고기 생산업체와 협회가 취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돈보기를 들이대며 ‘제재를 위한 제재’에 집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협의회는 특히 “공정위가 결정적인 이유로 제시한 ‘수요업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여짐’이라는 평가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자조금연구원

호남지역 시범 축산업체 방문 격려

(사)한국자조금연구원(이사장 박영인)은 지난 8월 29~30일 임원 및 학계·업계·언론계 대표 14명이 호남지역 양돈장(충남 홍성) 및 육계 계열화업체(전북 익산), 종돈장(전남 영광) 등을 방문, 최신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현황과 업계 현안문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축산물 수입개방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몰두하고 있는 업체 대표자들을 격려



했다.

그리고 축산업계의 관심사인 한·미 FTA 협상문제, 농지법 개정 문제, 축산환경 개선문제 자조금 운영개선 문제(법 개정 등) 등에 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국회의원과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광동경)는 ‘급식 위생안전! 우수 식품기기 사용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2일 국회의원 회관 1층 로비에서 ‘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인해 식재료 유통 체계 마련과 위생적인 급식시설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이에 단체급식 위생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식품 및 기기를 선별하여 전시했다.

전시식품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과 향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과 국내에서 개발한 특수공법으로 생산된 쌀과 천일염 등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재료가 전시됐으며, 전시기기로

는 감마선 살균식품조사 기기, 식품검수에 필요한 잔류농약 및 미생물 속성 분석기, 손(발)세정시스템 소독보관고 등 HACCP 기기, 위생적인 급식용수 확보를 위한 소독수 생성기, 오존 살균 정수기와 항균 바닥재 등 단체급식소에서의 위생사고 방지를 위한 기기가 전시됐다.

대한영양사협회는 본 전시회를 통해 위생적으로 우수한 식품 및 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급식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 개최

오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서

국내 축산업 연구 기술이 아시아 지역의 축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백인기 아시아태평양축산학회(AAAP) 회장(한국동물자원학회회장)은 오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동안 부산 전시 컨벤션센터(BEXCO)에서 아시아권 최대의 학술행사인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류의 복지를 위한 축산의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메인 행사인 학술대회 이외에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와 전시·사교·문화체험을 포함한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35개국에서 축산관련 학계와 관련업계 1,30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오상집 AAAP 조직위원장(강원대 교수)은 "국내 관심을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처방안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축산업의 발전 지표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며 대회 유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축산학계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축산학계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 축산학 연구와 기술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는 물론 아시아 지역 축산업의 주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축산업계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올해가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창립 50주년이자 한국 농업 연구 10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